

6 ‘청년은 지금’ 특별기획 - ③청년세대의 불평등



90-00년대 생들이 가지는 사회에서의 영향력이 날로 커져가고 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청년들이 새로운 리더로 부각되고 있다. 중장년층이 대부분의 조직에서 우위를 점했던 과거와는 대조되는 모습이다.

우리신문은 총 7회에 걸친 연재 기획 ‘청년은 지금’을 준비했다. ‘청년은 지금’ 기획은 대부분의 대학생에 해당하는 90-00년대 생들과 관련이 있는 건강, 정치, 경제, 문화, 사회적 이슈에 대한 전문가의 기고를 연재하는 코너다. 청년들이 알면 좋을 지식부터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청년들의 움직임까지 관련된 현상 전반을 전하고자 한다.

① 청년의 정신건강
② 청년정치
③ 청년세대의 불평등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계층 사다리의 바닥과 천장은 더욱 끈적끈적해졌다.

(사진=엔스플래쉬)

청년이 마주한 장벽사회, 어떻게 넘어설 것인가?

최 광 은
연세대학교
복지국가연구센터
전문연구원

지난 9월 8일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88개 4년제 대학의 신입생 자퇴율이 5.9%를 기록했다. 이는 10년 전의 3.3%보다 2.6%가 증가한 수치다. 서울 39개 대학의 신입생 자퇴율만 살펴보면, 2010학년도 2.9%에서 2020학년도 7.1%로 4.2%가 증가했다. 비수도권의 일부 국립대와 함께 서울 소재 대학의 신입생 자퇴율이 최근 가파르게 증가한 것이다. 물론 서울 소재 대학 내에서도 큰 차이가 있다. 2020학년도 기준 서울 주요 대학 신입생 자퇴율을 보면 서강대, 한국외대, 중앙대는 10%가 넘고 경희대와 서울시립대가 8.2%를 기록했으며, 서울대가 3.5%로 가장 낮았다.

신입생 자퇴율 급증의 의미

자퇴생의 상당수는 이른바 ‘반수생’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제도전은 단순히 서열 상위권 대학을 노릴 뿐 아니라 ‘대입 피라미드’의 정점에 있는 의대를 노린다. 심지어 의대에 입학하더라도 제도전은 멈추지 않는다. 의대 중에서도 지방에 있는 의대의 경우 신입생 자퇴율이 10%가 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대학서열이 없었던 적은 없지만, 최근 그 서열과 인기학과의 줄 세우기가 강화된 것이 현재 한국 대학이 처한 현실이다. 이 현상은 단순히 상위권 대학이 아니라 좀 더 상위권의 인기 학과에 가야만 그나마 안정적인 삶을 보장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학 서열화로 심화된 삶의 격차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듯이 생존경쟁의 심화가 교육 투자의 동기를 강화했기 때문이다. ‘반수’를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과 돈을 투자해야 하지만, 원하는 대학의 원하는 학과에 들어

갔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이득이 그보다 훨씬 더 크다고 계산되는 것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증가도 일반적 기는 경향이 있다. 즉, 경제적 불평등 증가와 맞물린 교육에 대한 투자 수의 상승이 이런 현상의 배경이 된다. 교육 투자는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여력이 있는 중상위 계층에게 유리하므로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교육에서 더욱 중요해진 것도 당연한 이치다.

최근의 한 연구는 교육 기회의 불평등이 이전에는 4년제 대학 졸업 여부에서 나타나다가 대학교육이 점차 일반화되면서 이제는 상위권 대학의 졸업 여부에서 크게 나타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서열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 기회 자체가 가족 배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도 문제이지만, 대학서열 자체가 이후 노동시장 내부의 상당한 격차를 불러

온다는 것도 큰 문제다. 한국에서는 특히 노동시장 진입단계뿐만 아니라 퇴직단계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큰 대학서열별 임금 격차가 존재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격차는 나이가 증가하면서 점차 커져 40~44세 무렵에는 상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이 하위권 대학 졸업자의 임금보다 46.5%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서열은 임금 격차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장 종사 여부, 정규직 여부 등 일자리의 질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불러온다.

장벽사회를 마주한 오늘날의 청년세대

1990년대 말 외환 위기 이후 격차 사회라는 말이 종종 등장했다. 최근에는 장벽사회라는 말까지 나타났다. 격차가 점점 더 벌어져 넘어서기 어려운 장벽이 된 사회라는 뜻이다. 엄밀한 학술 개념은 아니지만, 사회 ‘능력 있는’ 부모는 학연이나 자연 현실을 잘 나타내는 용어다. 장벽이 높고 우회로가 없을 때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통해 개별적으로 장벽을 넘는 시도를 하는 것이다. 물론 더 두드러지긴 하지만, 부모의 지원으로 학업에 충실할 수 있는 대학생과 아르바이트를 해야만 해서 학업에 충실할 수 없는 대학생 사이

보면, 청년이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이나 불평등의 물림 수준은 최근 더욱 높아졌다. 안타깝게도 특히 20대 청년의 비판적 인식이 커진 데에는 그 현실적 근거가 분명하다. 지난 20여 년간 벌어진 변화를 통해 과거의 청년과 현재의 청년이 처한 조건을 비교해보면 그 근거가 잘 드러난다.

2000년대 이후 대학 및 대학원 졸업자는 계속 증가했다. 최근 20년 사이에 대학 졸업자는 약 1.5배, 대학원 졸업자는 약 2배나 늘었다. 그런데 20대 고용률은 하락과 정체를 반복했고, 실업률은 꾸준히 증가했다. 20대 실업률은 30대 실업률보다 훨씬 높았고, 20대 중에서는 남성의 실업률이 여성의 실업률보다 훨씬 높았다. 고용의 질도 눈에 띄게 나빠졌다. 정규직 일자리 비중이 크게 줄어든 가운데, 대기업 취업자 중 20대의 비율은 급감했다. 비정규직 비율의 증가는 특히 20대 저학력 남성에서 크게 두드러졌다. 90년대생으로 오면서 사회 이동성도 떨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000년대 이후 소득이나 일자리 지위의 상승이 점점 더 어려워졌다는 말이다. 소득이 낮았던 사람은 계속 낮았고, 소득이

높았던 일부만 소득이 가파르게 증가했다.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임시직에서 상용직으로,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옮기는 일은 점점 더 어려워졌다. 즉, 안정적인 일자리의 감소와 노동시장의 분절화 속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은 늘었는데, 결국 이들이 구할 수 있는 좋은 일자리는 더욱 줄어들었다. 이 비좁은 관문에서 서열 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대거 몰리고, 이들 대학에 진학할 기회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을수록 더 많이 열려 있다. 또한, 한 연구에 따르면, 서열 상위권 대학 졸업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상위계층 출신의 대학 졸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얻을 확률은 하위계층 출신 졸업자보다 훨씬 높았다.

청년정책을 넘어서는 청년정책, 노동시장 구조 개혁

결국 최근의 노동시장 변화가 20대 청년을 극심한 경쟁으로 내몰면서 이들의 경제적 처지를 크게 악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노동시장의 변화를 중심으로 청년의 사회경제적 처지가 악화한 것은 단순히 기존의 청년정책이 부족해서라거나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해서가 아니다. 이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구조 변화가 청년세대를 짓눌러 벌어진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청년이 마주한 불평등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역설적으로 청년정책이 청년정책을 넘어서야만 가능하다.

저성장 경제의 지속으로 정부와 기업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없었다는 말들을 많이 해왔다. 하지만 이런 조건 속에서도 기업소득은 가계 소득을 훨씬 앞질러 왔다. 총국민소득에서 가계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나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 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또한 계속 확대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의 다층적 심화는 전 세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전가했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는 청년에게도 무척 고통한 것이었다. 각종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청년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런 배경을 갖지 못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인 소모품으로 사용

되거나 아예 배제되었다. 청년세대 내부의 격차는 더 벌어졌고, 계층 사다리의 바닥과 천장은 더욱 끈적끈적해졌다.

일자리보장과 소득보장의 이분법을 넘어

청년의 사회이동을 촉진하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과감한 정책은 아직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는 것이 없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소 기본소득이 주요 이슈로 떠오르는 1998년 72.8%에서 2017년 61.3%로 11.5%나 줄어든 반면,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8년 13.9%에서 2017년 24.5%로 10.6% 증가했다. 기업과 가계 사이의 소득 격차 확대뿐만 아니라 상·하위 계층 사이의 자산 및 소득 격차 또한 계속 확대되었다. 이러한 불평등의 다층적 심화는 전 세대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고통을 전가했지만, 앞서 살펴 보았듯이 이는 청년에게도 무척 고통한 것이었다. 각종 지원을 동원할 수 있는 청년은 이 변화의 과정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을 수 있었지만 그런 배경을 갖지 못한 청년은 노동시장에서 일시적인 소모품으로 사용

득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최저임금과 비슷한 수준의 한시적 일자리를 이를 원하는 청년에게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삶을 설계하곤 청년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감성이나 구호로 소비되는 청년 담론이나 백화점식 청년정책 나열로 청년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는 없다. 느린적 조세 개혁과 사회보장 확충을 통한 재분배와 함께 불평등을 심화하는 분배구조 자체를 원천에서부터 재구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아울러 일자리 자체의 큰 변화가 필요하다. 특정 직업군과 직업 지위에서 상층을 차지하는 일부가 과도하게 누리는 혜택을 걷어내고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턱없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노동자의 삶을 대폭 개선해야 한다. 당장 적합한 일자리를 찾기 못해도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며 다음 기회 또는 다른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돕는 종합적인 정책도 마련되어야 한다. 입시와 교육 불평등 문제의 해법도 사실 여기에 있다.